

통신문·배수갑문 확장 기본조사 내년 착수

■영산강 뱃길복원 예산반영 실태·향후 전망

내년 예산 고대 문화권 개발 포함 시킬 듯
투명한 사업 진행·친환경 개발 과제로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에 승풍이 불고 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영산강 뱃길 복원 관련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프로젝트도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 파괴 및 대운하 재추진 논란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영산강 뱃길 복원 예산=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영산강 하도준설(호남정비 포함)과 전변 저류지 조성 예산 285억원을 반영했다. 하도 준설은 말 그대로 강의 바닥에 쌓여있는 모래나 암석 등을 제거,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뜻으로 사실상 정부가 영산강 뱃길 복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회 농수산식품위는 지난해 전체회의를 갖고 영산강 통신문 및

■영산강 프로젝트 관련 2009년 예산 반영 현황

사업명	반영액 (단위: 억원)
영산강 하도 준설 및 천변지류 조성사업	285
영산강 배수갑문과 통신문 확장사업	10
영산강·영암호 연락수로 확장사업	20
영산강 수질 개선사업	1,400
영산강변도로 조성사업	60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사업	38

배수갑문 확장 사업을 위한 기본조사비 10억원과 영산강-영암호 연락수로 확장 사업 기본조사비 예산 20억원을 통과시켰다.
농촌공사가 영산강 통신문 확장 사업 예산 등에 대해 '영산강 뱃길 복원'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국회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 차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영산강 배수갑문과 통신문 확장 등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을 살려내기 위한 주요 사업비가 반영돼 전남도가 추진중인 '영산강 뱃길복원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됐다. 영산강 하구연 배수갑문 전경. /위정각기자 jrwi@kwangju.co.kr

뱃길 복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영산강 프로젝트 청신호=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프로젝트도 청신호가 켜졌다. 영산강 프로젝트의 핵심인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에 국고 예산이 반영된 데다 관련 예산 확보도 순조롭게 풀이되고 있다.
우선 문화관광부가 내년 예산에 영산강 강변도로 조성 사업과 영산강 유역 고대 문화권 개발 사업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문광부 예산은 이번 국회 심

의에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도 하수종말처리장 조성 등 영산강 수질 개선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영산강 하구둑 대체 교량 개선 사업과 보성~임성간 철도 노선 변경 예산 반영 등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향후 전망=일단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 등 영산강 프로젝트는 내년 유역 고대 문화권 개발 사업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문광부 예산은 이번 국회 심

영산강 뱃길 복원을 둘러싸고 환경부문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데다 정부의 대처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파문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회 농수산식품위의 예산 반영 과정에 참여했던 전남지역 모 국회의원은 "대운하를 의심하는 눈초리와 환경 파괴 논란 등에 따라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은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내년부터 3자녀 가정에 자동차 취·등록세 50% 감면

市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 상정

이르면 내년 1월부터 3자녀를 둔 가정이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가 각각 50% 감면된다.

광주시는 17일 "다자녀 가구,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빼대로 한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광주시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 3명을 둔 가정이 자동차(승용차 2000cc이하, 승합차 6.5톤 이하, 화물 9톤 이하)를 구입할 경우 1대에 한해 취·등록세가 각각 50% 감면된다.

감면 혜택은 기존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물론 출생으로 자녀수가 3명이 된 가정에도 적용된다. 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조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산업용 건축물 개축 등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 기존 지방세법에서는 산단에 신규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건축물 신·증축에만 면세 혜택을 적용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단지 내에서 개축·대수선을 위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에 대한 면세도 확대된다. 취·등록세 면세대상이 기존 공장, 벤처기업에 한정됐으나,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도 취·등록세 면세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개정안이 오는 12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대형사업 지역발전 항목 50% 반영을"

김영록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김영록 민주당 의원(해남·진도·안도)이 17일 대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50% 이상 반영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역 체납자의 기준이 너무 높아 과태료 납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지방재정 확충 등의 효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고역체납자의 기준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정안'과 어선관리업무일원화와 선박관리공단 설립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어선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나치게 경제성 분석에 치우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광주시의회는 1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시정의 난맥상을 추궁했다.

특히 이날 감사에서는 디자인센터의 허술한 경영, 수의계약 남발, 부실한 인력관리 등 총체적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산업건설위원회=조호권(민주·북구 4) 의원은 이날 디자인센터에 대한 감사에서 "떡포장재 제작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조달청에 입찰을 맡기고, 어떤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떡 포장재 제작(범용)사업'을 추진하면서 6월에는 2천565만 원을 들여 조달청에 사업체 선정

디자인센터 수의계약 남발 이유 뭔가 빛고을장학재단 기금 출연 왜 안했나

위한 입찰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같은 해 10월 비슷한 명칭의 '떡산업육성사업' 떡 포장재 개발 결과물 제작 용역'을 추진할 때는 5개 업체에 500만 원씩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조 의원 주장이다. 조 의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5곳 중 4곳이 디자인센터에 입주한 업체라면 오해를 살 만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유재신(민주·광산 2)의원은 "지난 4월 열린 '하우징자재산업 워크숍' 행사에는 전 직원 22명 가운데 19명이,

지난 6월 개최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개원식에는 18명이 출장을 갔다"면서 "도대체 근무를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유 의원은 또 최초 인사발령 이후 34개월간 무려 16차례 인사를 단행한 것을 비롯, '6개월 이내 전보될 수 없다'는 인사관리 규정(25조)에도 불구하고 직책을 맡긴 지 27일, 58일만에 인사 조치를 한 이유를 추궁하기도 했다.

양혜령(민주·동구 1)의원도 "디자인센터 연구지원실 운영규칙이 지난

7월 바뀌었는데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금 930만 원을 추가로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자인센터측은 이와관련, "소규모 디자인업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일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산출계약서가 뒤늦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정자치위원회=이정남(민주·광산 3)의원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

사에 나서 (재)빛고을장학재단의 기금 조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8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설립해 놓고 고작 32억원 정도만 조성됐다"면서 "특히 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6년간 10억씩 60억을 출연키로 했는데 2년간 20억을 낸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광주시측은 이에 대해 "당초 운영결과 제시된 23개 과제 가운데 2개 사업만 보류됐을 뿐 나머지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사회위원회=조광환(민주·비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지난 3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법이 강화됐는데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검사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내집마련, 내맘대로!

광주 수완·하남 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분양!

- ▶ 가격도 내 맘대로 - 분양가 상한제 가격보다 저렴
- ▶ 계약 방식도 내 맘대로 - 분양 전세 선택
- ▶ 분양금 납부도 내 맘대로 - 분양가의 약 45%, 입주후 3년간 분납
- ▶ 소유권 이전도 내 맘대로 - 소유권 이전 시기 선택

선착순 계약!
11월 27일(목)부터

구분	공급면적(㎡)	세대수	분양가	전세가
수완 1차	110	62	16,800	11,000
수완 2차	117·118	368	16,800	11,000
하남 1차	117	576	16,800	10,000
하남 2차	117	957	16,800	10,000

"사랑으로, 부영"의 특별한 혜택, 지금 만나보세요!

▶ 전금 부담 없음! ▶ 즉시 입주가능! ▶ 발코니 확장 및 (분양가 약 45% 분납) ▶ 입주 자금 3개월 전·후면 세시 설치

문의 전화

062) 365-8324

1577-5533

계곡서점: 062-365-8324, 062-365-8325, 062-365-8326, 062-365-8327, 062-365-8328, 062-365-8329, 062-365-8330, 062-365-8331, 062-365-8332, 062-365-8333, 062-365-8334, 062-365-8335, 062-365-8336, 062-365-8337, 062-365-8338, 062-365-8339, 062-365-8340, 062-365-8341, 062-365-8342, 062-365-8343, 062-365-8344, 062-365-8345, 062-365-8346, 062-365-8347, 062-365-8348, 062-365-8349, 062-365-8350, 062-365-8351, 062-365-8352, 062-365-8353, 062-365-8354, 062-365-8355, 062-365-8356, 062-365-8357, 062-365-8358, 062-365-8359, 062-365-8360, 062-365-8361, 062-365-8362, 062-365-8363, 062-365-8364, 062-365-8365, 062-365-8366, 062-365-8367, 062-365-8368, 062-365-8369, 062-365-8370, 062-365-8371, 062-365-8372, 062-365-8373, 062-365-8374, 062-365-8375, 062-365-8376, 062-365-8377, 062-365-8378, 062-365-8379, 062-365-8380, 062-365-8381, 062-365-8382, 062-365-8383, 062-365-8384, 062-365-8385, 062-365-8386, 062-365-8387, 062-365-8388, 062-365-8389, 062-365-8390, 062-365-8391, 062-365-8392, 062-365-8393, 062-365-8394, 062-365-8395, 062-365-8396, 062-365-8397, 062-365-8398, 062-365-8399, 062-365-8400